

한국의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 정책의 현황 및 시사점

신 석 하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최근 우리 경제가 낮은 성장률을 지속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기순환적 요인도 있었겠지만,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향후 얼마나 낮아질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고, 그것의 의미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장기적 시계를 갖고 운용되는 경제 계획들의 현황과 문제점도 검토해보고자 한다.

1. 한국의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

국회에산정책처(2012), OECD(2012), 신석하 외(2013) 등 우리 경제의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에 관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인구고령화에 기인하여 2050년대에는 1%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연구별로 전망방법 및 전제의 세세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인 방법론은 유사하므로, 이 글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수행한 신석하 외(2013)의 전망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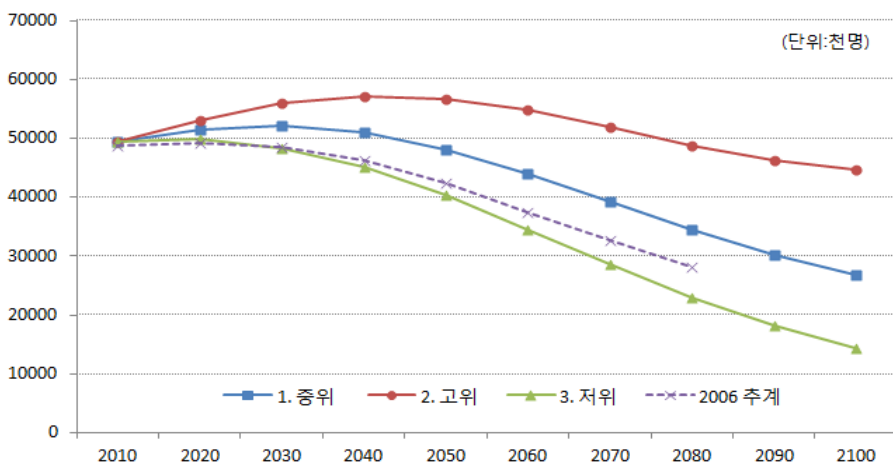
장기 경제성장률은 공급 측면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통상적으로 콥-더글러스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전망한다. 즉 국내총생산이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각 요소를 전망한 후 요소별 성장 기여도를 합산하여 경제성장률을 전망한다.¹⁾ 생산요소 간에 다양한 상호작용이 존재할 것이지만, 아직까지 이를 반영할 적절한 방법론이 부족한 실정이다.²⁾

1) 요소별 성장 기여도는 생산 요소 증가율에 생산 요소의 소득 분배율을 곱한 값으로 계산된다. 신석하 외(2013)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을 0.654로 가정하였다.

2) 신석하 외(2013)에서는 노동 및 총요소생산성의 증가가 GDP를 늘리고, 외생적으로 결정된 저축률 하에서 저

향후 우리 경제의 가장 커다란 변화 요인인 인구고령화에 대해서는 통계청에서 3개(중위, 고위, 저위) 시나리오의 인구추계를 제공하고 있다. 중위 시나리오에서는 우리나라 인구가 2030년경부터, 고위 가정에서는 2040년경부터, 저위 가정에서는 2015년경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각각 전망되고 있다. 인구 규모만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구조도 급속히 고령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15-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인 노인부양비는 시나리오에 따라 2030년에 37.2~39.6%, 2060년 77.2~86.3%, 2100년 67.9~99.2%로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 인구추계 시나리오별 총인구 규모



자료: 신석하 외(2013).

인구 규모의 감소 및 인구구조의 변화는 노동공급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다. 노동공급은 전체 인구를 성·연령·학력으로 세분된 26개 인구집단으로 나누어 경제활동인구를 추정하고 여기에 자연실업률을 적용하여 전망되었다.³⁾ 비교적 가까운 미래인 2012~2030년 기간에는 연령, 학력수준, 가구주 여부, 혼인상태, 농가인구비율 등 인구 및 가구학적 특성을 설명변수로 하는 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인구집단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전망하였다. 반면 2030년 이후 기간에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 성별 격차의 축소, 은퇴연령의 상승 등 인구집단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요인들을 외국의 사례와 제도적 요인의 변화를 참고하여 설정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축이 늘어나 자본 축적도 증가하는 제한적인 경로는 반영되어 있다.

- 3) 취업자수보다 근로시간수가 더욱 정확한 노동투입량 지표이지만, 신석하 외(2013)에서는 평균근로시간에 관한 신뢰할만한 통계치가 부족하고 제도 변화 등 장기전망이 용이하지 않다는 이유로 취업자수만 고려하였다. 반면 국회예산정책처(2012)는 인구집단을 세분하지 않는 대신 전체 경제활동인구와 평균 근로시간의 변화를 고려하였다.

<표 1> 우리나라 인구집단별 경제활동참가율 수준의 최종값

(단위: %)

연령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69	70-74	75 이상
<2010년>													
남 자	5.5	42.7	76.6	91.9	94.2	93.9	93.1	90.4	83.4	70.2	53.7	42.3	22.6
여 자	8.5	53.5	69.8	54.6	55.9	65.9	65.6	61.3	53.3	41.5	32.4	25.8	10.6
<2060년>													
남 자	25.0	62.0	83.0	95.0	96.0	96.0	96.0	93.0	90.0	75.0	57.0	33.0	20.0
여 자	25.0	68.0	88.0	81.0	84.0	86.0	86.0	82.0	78.0	62.0	45.0	24.0	12.0
<2100년>													
남 자	35.0	70.0	87.0	96.0	97.0	97.0	97.0	95.0	93.0	80.0	60.0	30.0	15.0
여 자	35.0	76.0	92.0	89.0	91.0	92.0	92.0	89.0	86.0	72.0	51.0	21.0	6.0

자료: 신석하 외(2013).

70세 이상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인구집단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성의 변화로 인해 점차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경제활동참가율(4주 기준) 전망

(단위: %)

	시나리오 1 : 중위			시나리오 2 : 고위			시나리오 3 : 저위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012	61.4	73.2	50.0	61.4	73.2	50.0	61.4	73.2	50.0
2020	61.5	72.7	50.9	61.5	72.6	50.8	61.6	72.8	51.0
2030	59.9	70.0	50.3	59.4	69.1	49.9	60.5	70.8	50.8
2040	57.0	65.5	48.9	56.4	64.3	48.7	58.1	67.3	49.5
2050	55.5	62.9	48.5	55.2	61.8	48.7	56.0	64.3	48.4
2060	55.2	61.4	49.2	55.3	60.8	50.0	54.8	61.8	48.2
2070	54.7	59.9	49.6	55.6	60.2	51.2	52.9	59.0	47.2
2080	55.8	60.7	51.1	57.8	61.9	53.7	52.5	58.2	47.1
2090	57.0	61.6	52.4	58.9	62.8	55.1	53.3	58.9	48.0
2100	56.8	61.2	52.5	58.9	62.4	55.3	53.7	59.1	48.6

자료: 신석하 외(2013).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과 인구규모의 감소가 맞물리면서 취업자수는 중위 시나리오의 경우 2024년 26,347천명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4) 신석하 외(2013)에서 자연실업률은 장기적으로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은 3.5% 수준(남성 3.8%, 여성 3.2%)

<표 3> 취업자 연평균 증가율 전망치

(단위: %)

	시나리오 1 : 중위	시나리오 2 : 고위	시나리오 3 : 저위
2011~2020	0.91	1.10	0.74
2021~2030	-0.02	0.21	-0.22
2031~2040	-0.58	-0.19	-0.96
2041~2050	-0.76	-0.24	-1.39
2051~2060	-0.99	-0.42	-1.72
2061~2070	-1.25	-0.49	-2.18
2071~2080	-1.05	-0.22	-2.22
2081~2090	-1.12	-0.37	-2.20
2091~2100	-1.23	-0.40	-2.24

자료: 신석하 외(2013).

인구고령화는 자본 축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주로 피부양인구비율이 높아지면서 저축률이 낮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프랑스, 일본, 독일, 이탈리아의 4개국과 한국 자료를 이용한 패널회귀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우리 경제의 총저축률을 전망해보면, 저축률이 2040년에는 22.4%, 2080년에는 18.7%, 2100년에는 18.2%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나타난다.⁵⁾ 이는 우리 경제의 장기 저축률이 2010년 OECD 국가들의 평균 저축률 수준(19.7%)을 소폭 하회할 것임을 의미한다.

저축률과 투자율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영구재고법을 이용하여 자본스톡을 전망하면, 저축률 하락으로 인해 자본스톡의 증가세도 점차 둔화될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저위 시나리오(3)의 경우, 낮은 출산율로 인하여 피부양인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2060년 중반 이후에는 자본스톡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총요소생산성은 과거 추이 및 선진국의 경험, 결정요인의 추이 등을 정성적으로 감안하여 설정되었다.⁶⁾ 성장 관련 문헌은,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의 생산성 증가율이 선진국보다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으로 수렴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총요소생산성은 1980년대 이후 점차 증가율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신석하 외(2013)에서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2011~20년 기간의 1.6% 수준에서 점차 낮아져 장기적으로는 OECD(2012)의 장기전망에서 사용한 선진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인 1.3%로 수렴하는 것으로 전제하였다.

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5) 회귀식에 비해 우리경제의 저축률이 높은 값을 지속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회귀식과의 잔차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영하여 저축률 전망결과를 조정한 결과이다.

6) 제도 변수를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식을 이용하여 정량적 방법을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회귀식 설정의 오류(misspecification)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개별 설명변수에 대한 전제를 설정해야 한다는 부담이 발생한다.

〈표 4〉 자본스톡 증가율 전망과 비교

(단위: 증가율, %)

	시나리오 1 (baseline: 중위)	시나리오 2 (고위)	시나리오 3 (저위)
2011-2020년	4.3	4.3	4.3
2021-2030년	3.3	3.3	3.4
2031-2040년	2.2	2.3	2.2
2041-2050년	1.5	1.7	1.2
2051-2060년	0.9	1.2	0.6
2061-2070년	0.5	1.1	-0.2
2071-2080년	0.8	1.7	-0.4
2081-2090년	1.0	1.8	-0.3
2091-2100년	0.8	1.6	-0.3

자료: 신석하 외(2013).

생산요소별 전망을 종합하면, 한국경제의 실질GDP 성장률은 2011~2020년 기간 중 연평균 3.6%에서 2020년대 2.7%, 2030년대 1.9%, 2040년대 1.4%로 계속 둔화되고, 그 이후 기간에는 1% 내외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령화로 인해 취업자가 감소하고 자본스톡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됨에 따라 성장률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낮아지는 것이다. 다만 2050년 이후에는 인구구조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냄에 따라 경제성장률도 비교적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는 모습이다.⁷⁾

〈표 5〉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 시나리오1(baseline): 요인별 기여도

(단위: 증가율, %)

	GDP	물적자본	취업자수	TFP
1981~1990	8.6	4.3	1.7	2.5
1991~2000	6.4	3.4	1.2	1.9
2001~2010	4.5	1.9	0.8	1.8
2011~2020	3.6	1.5	0.5	1.6
2021~2030	2.7	1.2	0.0	1.5
2031~2040	1.9	0.8	-0.4	1.5
2041~2050	1.4	0.5	-0.5	1.4
2051~2060	1.0	0.3	-0.7	1.3
2061~2070	0.7	0.2	-0.8	1.3
2071~2080	0.9	0.3	-0.7	1.3
2081~2090	0.9	0.3	-0.7	1.3
2091~2100	0.8	0.3	-0.8	1.3

자료: 신석하 외(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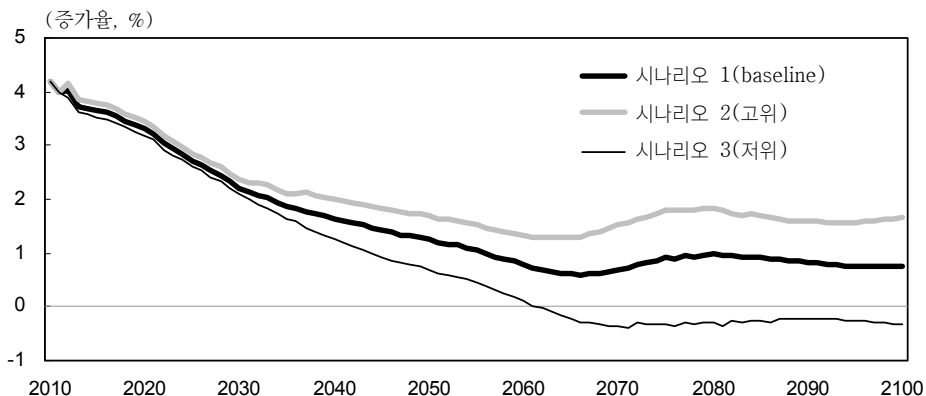
7) 한편 GDP 대비 자본스톡의 비율은 계속 상승하다 2030년대 중반 이후 3.5 내외 수준에서 안정되는 모습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 결과는 국회예산정책처(2012)와 OECD(2012) 등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국회예산정책처(2012)는 우리 경제 성장률이 2020년대 2.7%, 2030년대 2.1%, 2040년대 1.7%, 2050년대 1.1%로 전망하였으며, OECD(2012)는 2011~30년 기간 중 2.7%, 2030~60년 기간 중 1.0%로 전망하였다.

경제 전체 성장률 둔화가 주로 인구고령화에 기인하므로, 일인당 소득의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작은 영향을 받는다. 인구 일인당 GDP 증가율은 2011~20년 기간의 3.2%에서 점차 낮아지지만 2030년 이후 2% 내외(1.8~2.2%)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 정도의 증가세만 유지해도 우리 경제의 일인당 GDP가 2012년에 미국의 50% 수준이었던 것이 2020년에 60%, 2050년에 70~80%, 2100년에 80~100% 수준으로 높아지게 된다.⁸⁾

한편 인구의 고위 시나리오나 저위 시나리오가 실현된다고 해도, 2030년까지는 거의 유사한 정도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시나리오 간 차이는 2030년 이후부터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인구고위 시나리오의 경우 baseline 전망에 비해 2030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0.3~0.8%p 높게 나타나고, 인구저위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baseline 전망에 비해 2030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0.3~1.1%p 낮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시나리오 간 성장률 전망치 차이가 2030년 이후 확대되는 것은 시나리오 간 합계출산율의 차이가 노동공급 및 저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한편 일인당 GDP는 인구 시나리오 간 차이도 훨씬 작게 나타나며, 대체로 2030년 이후에는 2% 내외 수준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그림 2> 인구 시나리오별 실질 GDP 전망 추이



8) 미국의 일인당 GDP 성장률은 2040년까지 Global Insight 전망치를 사용하였으며, 이후의 성장률은 2040년 성장률 전망치(1.8%)가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통상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실질환율이 하락(원화까지 절상)하게 되는데, 본문의 수치는 일인당 GDP 증가율 또는 미국과의 상대적 소득수준을 통해 추정된 환율의 변화분을 적용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전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그동안 진행되어 온 출산율의 하락 및 평균 연령의 증가로 인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각 인구집단별 경제활동참가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지는 경우에도 전체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진국 사례를 보았을 때 피부양인구 부담으로 인해 저축률이 하락하는 현상도 바꾸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인구 시나리오별 전망 결과는 출산율이 지금부터 높아진다고 해도 그 효과는 20~30년이 지난 후에야 나타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경제 전체의 성장률 둔화는 불가피하지만, 이를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일인당 소득의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작게 영향을 받아 2% 내외의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망에서 제시된 수준의 증가세만 유지해도 선진국과의 격차를 완만하게나마 줄여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총요소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위의 전망 결과는 총요소생산성이 장기적으로 1.3%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일인당 소득 증가의 절반 이상이 생산성 향상에 기인함을 의미한다. OECD(2012)에서 향후 선진국들이 이 정도의 생산성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제하고 있으므로, 우리 경제도 선진국의 평균 정도만 하면 달성할 수 있는 전제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경제 전체 성장률이 1%인데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이보다 높은 1.3%를 오랜 기간 유지한 사례는 세계 역사상 쉽게 찾기 힘들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정도의 생산성 증가세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과제로 여겨진다.

이와 같이 향후 한국의 경제성장에서 총요소생산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최근 한국 경제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세가 어떠한 상황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2. 최근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세 평가

총요소생산성은 생산물 중 생산요소로 설명되지 않은 부분을 지칭한다. 즉 생산요소가 생산 과정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를 의미한다. 총요소생산성은 일차적으로 생산기술과 관련된 기술적 지식의 양 또는 수준에 영향을 받지만, 동일한 기술적 지식을 사회가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관련 문헌들은 사회적 하부구조 또는 정책 및 제도가 총요소생산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지적하고 있다.

경제 발전과 함께 총요소생산성 증가세도 점차 둔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발전 초기에는 더 효율적인 산업부문으로 생산요소를 배분하거나 선진국 따라잡기(catch-up)를 통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기술 및 제도적 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기술 및 제도적 환경이 선진국 수준으로 수렴하면서 생산성 증가세도 둔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련 연구들은 우리 경제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세가 1980년대 이후 둔화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최근에도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둔화 속도가 최근에는 늦춰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⁹⁾ 총요소생산성은 직접 관측되지 않고 성장회계로부터 얻어지는 쓸로우 잔차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하게 되는데, 성장회계 방식에 따라 다른 결과가 제시될 수 있다.

우리 경제의 2000년대 총요소생산성 증가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유사한 성장회계 방식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가정 및 사용 자료의 차이로 인해 매우 상이한 추정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생산성본부(2012)와 OECD(2013)는 2000년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1990년대보다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추정한 데 비해, 조태형 외(2012)와 Conference Board(2013)는 1990년대보다 소폭 높아진 것으로 추정하였다.

<표 6> 기존연구의 성장회계 결과(성장기여도)

(단위: %, %p)

연구명	기간	국내총생산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한국생산성본부(2012)	1981~1990	9.4	2.2	6.6	0.6
	1991~2000	6.1	1.4	4.2	0.5
	2001~2010	3.8	1.3	2.2	0.2
조태형 외(2012) ¹⁾	1981~1990	10.1	3.1	4.2	2.0
	1991~2000	4.9	1.7	3.6	1.1
	2001~2010	3.7	0.9	2.0	1.2
Conference Board (2013)	1981~1990	—	—	—	—
	1991~2000	6.6	1.4	3.1	2.0
	2001~2010	4.2	0.4	1.7	2.1
OECD(2013)	1985~1990	9.9	1.9	2.2	5.8
	1991~2000	6.3	0.7	2.0	3.7
	2001~2010	4.2	-0.1	1.2	3.1

주: 1) 조태형 외(2012)는 실질총소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위 표에서는 비교의 편의상 실질산출물가격효과라는 추가 요인을 누락하였으므로 요인별 성장기여도의 합이 국내총생산 증가율과 차이가 남.

자료: 신석하(2014)에서 재인용.

신석하(2014)의 분석에 따르면, 상이한 결과의 가장 큰 원인은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한 가정이며, 다음으로 자본소득 추계방식의 차이이다. 통일된 방법론을 사용한 상태에서 노동소득분배율

9) <표 5>에서는 2000년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1.8%로 1990년대의 1.9%보다 소폭 낮아진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성장회계에 사용되는 방식은 전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기때문에, 여기서는 생산요소의 세부 구성 및 질적 변화를 고려하지 못했으며 요소소득 분배율도 평균적인 수치로 가정한 결과이다.

만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가정들을 적용할 경우, 2000년대와 1990년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차이가 1.3%p까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본스톡 추계방식만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도 2000년대와 1990년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차이가 0.6%p까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된 방법들 중 비교적 합리적인 방법들을 채택하여 총요소생산성을 다시 추정해보면, 2000년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1990년대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¹⁰⁾ 즉 2000년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연평균 0.9%로 추정되어 1990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0.8%보다 0.1%p 높게 추정되었다. 2000년대 경제성장률이 1990년대에 비해 연평균 2%p 정도 하락하였으나, 이러한 성장세 둔화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아니라 요소투입의 기여도가 2.1%p(노동 0.3%p, 자본 1.8%p) 하락함에 따라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5년 단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2000년대 전반에 비해 2000년대 후반에 다소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7> 우리 경제의 성장회계 결과

(단위: %, %p)

	국내총생산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1981~1990	9.1	2.0	4.3	2.9
1991~2000	6.2	1.6	3.8	0.8
2001~2010	4.2	1.3	2.0	0.9
1981~1985	8.5	1.2	3.3	4.0
1986~1990	9.7	2.7	5.3	1.8
1991~1995	7.4	2.2	4.6	0.6
1996~2000	4.9	0.9	3.0	1.0
2001~2005	4.5	1.3	2.2	1.0
2006~2010	3.9	1.3	1.8	0.8

주: 국내총생산은 연평균 증가율로 측정되고, 다른 요소들은 연평균 성장기여도로 측정됨.
자료: 신석하(2014).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 경제의 생산성 증가세가 지속 가능한 수준에 수렴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앞 절의 성장 전망에서 총요소생산성 증가세가 완만히 둔화되어 일정 수준에 수렴한다는 전제와 상충하지는 않는다.

10) 이와 같은 결과는 노동소득분배율과 자본추계기법을 합리적 범위에서 변경하여도 성립한다. 비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동일한 인적 특성을 지닌 임금근로자 시간당 임금의 50~70% 수준이라는 비교적 현실적인 가정 하에서 도출한 노동소득분배율을 적용하면,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차이는 $\pm 0.1\%$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대다수 연구들이 사용하는 영구재고법으로 추정된 자본스톡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2000년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990년대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3.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된 정책 현황

지금까지의 논의로부터 두 가지 정책적 요구가 도출될 수 있다. 첫째는 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재정 여건을 추계할 때,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인구고령화로 인해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경제 전망의 전제가 되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세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와 관련된 정책적 현황을 간략히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 경제에는 국가재정운용계획(5년), 에너지기본계획(20년), 국민연금 재정추계(70년) 등 다양한 시계의 중장기 계획 및 추계 작업들이 수행되고 있으며, 경제성장 전망은 기본적인 전제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 경제성장을 체계적으로 담당하는 정책 주체의 부재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첫째 공식적인 장기 경제성장 전망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별 계획이나 추계 작업마다 다른 경제 전망치가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1년 말 장기재정전망협의회를 구성하여 통일된 장기경제전망 가정과 재정추계 방법을 사용하여 공적 연금 및 사회 보험을 포함한 전체 재정부담을 2060년까지 추산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후 조직 변경, 새정부 취임 등의 이유로 정책적 관심이 저하되어 추계 결과의 공표가 지연되고 있다. 2013년에 발표된 제3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작업은 당시 장기재정전망협의회의 경제전망치를 기반으로 수행되었지만,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만 발표되고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전제는 아직까지 공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단기적인 경제계획의 목표치가 중장기 성장률 전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향후 5년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계획 초기 기간에는 단기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만, 중반 이후 기간에는 장기성장률 전망을 적용하는 것이 경제이론과 부합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중장기 성장률 전망치가 각종 단기 경제계획에서 설정된 성장 목표치와 상충되지 않도록 조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14~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15년 이후의 성장률이 정부의 목표치를 반영하여 4%로 고정되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설정된 2018년의 성장률 4%는 이후 기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전망의 정밀성을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 노력이 부족하다.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 방법 및 전제들에 대하여, 개별 연구자나 연구기관을 넘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인구집단별 경제활동참가율이 향후 얼마나 상승할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저축률은 얼마나 하락할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요소소득분배율의 가정은 적절한 수준인지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과 부합되는 명목 거시경제변수의 전망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경우 실질 경제성장률보다 명목 경제성장률이 더 중요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등 재정추계에서도 실질 경제성장률 이외에 명목 이자율과 임금 상승률이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한편 에너지기본계획의 경우 에너지원별·용도별 수요를 합산하여 전체 에너지 수요를 전망하기 때문에 의견 수렴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될 위험이 존재하며, 전체 에너지 수요와 거시 경제변수 간의 정합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한다.

한편 장기적인 시계에서 경제성장을 체계적으로 담당하는 정책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요소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최근 정부의 경제정책은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보다는 단기적인 경기변동에 집중되는 느낌이다.

1997년 경제위기와 달리,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에는 구조개혁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점은 우려할 만한 부분이다. 우리 경제의 생산성 증가세가 2000년대에 유지될 수 있었던 데에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이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가 많다. 반면,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에는 근본적인 구조개혁보다 위기국면의 부정적 충격을 관리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전반부에 비해 후반부의 중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낮았던 것은 금융위기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으나, 구조개혁의 부족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중요소생산성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의 개발이 아니라, 좀 더 효율적인 생산과정이 채택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손쉬운 지대 추구를 방지하고 생산적 행위를 장려하는 유인체계를 확립하고, 시장경제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등 사회·경제 체계의 근본적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관피아, 소득불평등 악화, 노동시장의 이분화, 사회적 이동성 하락, 교육제도 개선, 동반성장 등 다양한 이슈들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중요소생산성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중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엽적인 부분에서의 개선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우리 사회경제 체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4. 시사점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이미 진행되어온 인구고령화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출산율이 즉각 높아지더라도 향후 20년 동안은 경제 전체의 성장률 하락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전망에서 전제한 바와 같이 생산성 증가세가 유지된다면, 1인당 소득은 선진국과의 격차를 점진적으로 줄여갈 것이므로 그리 비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이유는 없다.

문제는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적절히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충분히 기울여지고 있는지 일 것이다. 불행히도 사회 전반적으로 장기적인 이슈에 대한 관심이 부족할 뿐 아니라, 장기적인 시계에서 각종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구조개혁을 책임지고 추진할 정책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처 간 이해관계나 단기 계획의 제약을 넘어서, 장기 계획 및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추

진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이를 총괄할 컨트롤 타워의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남북통일 등 근본적인 장기 위험요인까지 고려한 장기 계획 및 전략의 준비는 개별 부처 수준에서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까지 모든 정부는 비전 등 장기 전략을 나름대로 제시하였으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를 폐기하고 새로운 장기 전략을 수립하곤 하였다. 이처럼 국가 경제의 장기 전략이 5년마다 바뀐다는 것은 실효성 있는 장기 전략이 없다는 고백과 다를 바 없다. 어쩌면 향후 우리 경제성장에 가장 큰 위험요인은 인구고령화가 아니라 장기 전략이 없다는 것이 아닐까 싶다.

■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 『2012~206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 2012.

신석하 · 황수경 · 이준상 · 김성태, 『한국의 장기 거시경제변수 전망』, 한국개발연구원, 2013.

신석하, “한국경제의 2000년대 생산성 증가세 평가: 성장회계 분석방법 비교 · 분석,” 『한국개발연구』, 제36권, 제2호, 2014.

조태형 · 김정훈 · Paul Schreyer, 『1980~2010중 우리나라 실질소득의 증가요인 분석』, 금융경제연구 제480호, 한국은행, 2012.

한국생산성본부, 『중요소생산성 국제비교』, 2012.

Conference Board, *Total Economy Database*TM(<https://www.conference-board.org/data/economydatabase>, 접속일자: 2013. 10. 17).

OECD(<http://stats.oecd.org/>, 접속일자: 2013. 10. 17).

OECD, *Looking to 2060: Long-term Global Growth Prospects*, OECD Economic Policy Papers No. 3, 2012.